

이슈브리프

ISSUE BRIEF

발행일 2018년 12월 06일

| 금주 이슈 |

- I. 광주형 일자리, 의의와 한계 / 5
- II. 생계형 일자리로 내몰리는 노인들 / 15
- III. 왜 미국 중간선거에서는 가짜뉴스가 없었나 / 25

| 현안 보고 |

자유한국 i 노믹스(inomics) 해설

이슈브리프

2018. 12. 6

- Ⅰ. 광주형 일자리, 의의와 한계 / 5
- Ⅱ. 생계형 일자리로 내몰리는 노인들 / 15
- Ⅲ. 왜 미국 중간선거에는 가짜뉴스가 없었나 / 25

〈이슈브리프〉는 각종 현안이슈에 대한 분석과 전망, 대응방안 등을 제시함으로써 정책에 대한 이해를 돕고 의정활동에 참고·활용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보고서의 내용은 자유한국당과 여의도연구원의 공식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금주의 이슈

❖ 금주(12월 둘째 주)는 광주형 일자리, 노인 일자리, 미국의 가짜뉴스에 관한 3편의 이슈를 다루었습니다. 제1편에서는 광주형 일자리의 모델이 된 독일형 일자리 모델과 비교·분석하여 그 의의와 한계를 살펴보았으며, 제2편에서는 생계형 일자리로 내몰리는 노령층에 대한 실태와 대안을 분석하였습니다. 제3편에서는 지난 11월 치러진 미국의 중간선거에서 가짜뉴스를 감소하게 한 자율규제의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 제1편 : 광주형 일자리, 의의와 한계_김원표 수석연구위원

‘광주형 일자리’는 지자체 주도로 연대임금·연대고용을 위한 노사정 합의주의 전통을 세우려는 시도로서 각별한 역사적, 사회적 의미를 가짐. 그러나 광주형 일자리가 벤치마킹한 독일 슈투트가르트 모델과 ‘Auto 5000’은 독일 연방정부·지자체와 시민사회의 기여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노사 주도 혁신모델인데 반해 자치단체장 선거공약으로 출발한 광주형 일자리는 ‘관변적(官邊的)’ 속성이 두드러지고, 자본 편향과 노동 편향 사이를 오가며 동요하는 정치권 주도의 문제점을 고스란히 보여줌

❖ 제2편 : 생계형 일자리로 내몰리는 노인들_김영현 연구원

우리나라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은 OECD 회원국 중 1위, 65~69세 고용률은 45.5%로 EU 28개국보다 높은 수준임. 노인의 대부분이 근로소득으로 생활비를 충당하고 있는 가운데 노령층 일자리 대안 중 하나인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점이 다방면에서 제기되고 있음. 초고령사회를 목전에 둔 시점에서 급증하는 노인일자리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시장형 일자리 확대 방안 및 관련법 재·개정 등 현실적인 정책 마련이 필요함

❖ 제3편 : 왜 미국 중간선거에서는 가짜뉴스가 없었나_김신의 연구원

2017년 5월 촛불혁명, 인터넷 민주주의를 외치며 탄생한 문재인 정권은 온라인상의 정부에 비판적인 게시물에 대해 지속적 탄압을 가하고 있음. 2018년 1월 민주당의 네티즌 고발로 오히려 민주당과 드루킹의 여론조작 공생관계가 드러났으며, 구글과 방심위에 정권에 불리한 내용이 담긴 게시물의 삭제를 요청하였으나 '해당없음'이라는 판정을 받기도 함. 반면, 미국은 지난 11월 중간선거에서 IT 기업의 자율 규제에 맡김으로 인해 오히려 가짜뉴스가 줄어드는 효과를 가져왔음

2018. 12. 6

(재)여의도연구원 원장 김 선 동

I. 광주형 일자리, 의의와 한계

‘광주형 일자리’는 지자체 주도로 연대임금·연대고용을 위한 노사정 합의주의 전통을 세우려는 시도로서 각별한 역사적, 사회적 의미를 가짐. 그러나 광주형 일자리가 벤치마킹한 독일 슈투트가르트 모델과 ‘Auto 5000’은 독일 연방정부·지자체와 시민사회의 기여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노사 주도 혁신모델인데 반해 자치단체장 선거공약으로 출발한 광주형 일자리는 ‘관변적(官邊的)’ 속성이 두드러지고, 자본 편향과 노동 편향 사이를 오가며 동요하는 정치권 주도의 문제점을 고스란히 보여줌.

1. 선행하는 모델들

□ 광주형 일자리의 모델 ‘슈투트가르트 도시공동체 모델’

- 윤장현 민선 제6기 광주광역시장이 광주형 일자리의 모델로 슈투트가르트 모델을 제시
 - 벤츠와 포르쉐의 도시 슈투트가르트는 독일 남서부 바덴-뷔르템베르크(Baden-Württemberg)주 주도(州都)로 전통적으로 제조업이 발달
 - 1990년대 글로벌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면서 심각한 경제위기에 직면했으나 2000년대 들어 유럽포럼에서 경제발전의 모범지역으로 선정할 정도로 성공적으로 경제위기 극복

○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노조가 과거 노동의 이해 대변자에서 ‘기업가’로 변신

- 경제위기 여파로 대립적 노사관계가 심화되어 경기침체를 더욱 가속화시키는 악순환에 빠지기 쉬운 상황에서 금속노조가 기업과 파트너십을 구축, 노동과 산업의 전반적 혁신을 주도하며 경제위기 극복에 나서는 새로운 노사관계 모델 제시

○ 경제사회주체간의 다양한 협력적 네트워크로 위기극복을 지원한 ‘도시공동체 모델’

- 이전에 상공회의소와 장인조합이 유일한 지역 공동조직이었는데 슈투트가르트 지역협의회를 비롯하여 기업, 노동조합, 정당, 대학, 연구소, 교회, 스포츠, 예술인 등 지역사회 구성원을 총망라하는 새로운 협력적 네트워크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동참
- 새로 생겨난 단체는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 지역사회에 대한 정체성과 협동의식, 사회문화적 환경 향상을 통해 지역사회 안정에 기여
- 주정부가 심각해지는 지역경제에 대처하기 위해 1994년 10월 구성된 슈투트가르트 지역협의회는 지역경제를 위한 정책의결기관으로 주민 직선으로 구성되는 의회를 갖고 지역경쟁력 제고는 물론 교육, 실업, 주택, 교통, 환경 등 지역사회의 각종 문제해결 위해 주민의 힘을 모으고 정책개발 지원

□ 광주형 일자리의 실질적인 롤모델 ‘아우토(Auto) 5000’

- 1990년대 독일 경제위기 극복 위해 폭스바겐사가 금속노조에 임금과 고용을 빅딜하는 획기적 제안을 함
 - 고비용·저효율의 늪에 빠진 독일 자동차 산업이 일본·한국 같은 신흥국가에 밀리면서 폭스바겐 본사가 있는 볼프스부르크 공장 생산량 격감, 고용 위기 도래
 - 독일 제조업이 해외로의 생산기지 이전이 본격화되자 고용악화에 대한 우려로 폭스바겐의 국내 생산기지 유지 여론 비등
 - 폭스바겐이 독립법인을 만들어 5천명의 실업자를 폭스바겐 직원 평균임금보다 20% 가량 낮은 수준인 월급 5000마르크의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아우토(Auto) 5000 제안
 - 기존 근로시간을 주 35시간에서 38시간으로 늘리고, 늘어난 시간을 학습공장 개념을 도입, 교육훈련 등에 할애
- 폭스바겐 노사에 다양한 이해주체가 참여하고, 외부인사나 전문가가 자문하는 등의 사회적 대화 적극 활용, 타협점 찾아 프로젝트의 지속 가능성 높임
 - 막바지 협상 타결 위해 당시 슈뢰더 총리가 직접 나서는 등 폴프스부르크시, 니더작센주 정부, 독일 연방정부가 노사가 고용과 임금, 노동시간 문제 등에 대한 접점을 찾아 합의를 이루도록 지원

○ 폭스바겐 본사 소재지 볼프스부르크에 Auto 5000 설립

- 2002년부터 7년간 존속하며 투란(Touran : 2002년 12월~2008년), 티구안(Tiguan ; 2007년~2008년)을 성공적으로 생산
- 2009년 1월 1일부로 잔류인원이 폭스바겐으로 고용승계되는 방식으로 프로젝트 종결

○ Auto 5000과 광주형 일자리 공히 임금과 고용을 전략적으로 빅딜

- 기존 폭스바겐 노사의 단협이나 교섭관행에서 벗어난 Auto 5000과 같이 광주형 일자리 모델도 독립법인 설립
- 폭스바겐 노조가 대각선 교섭¹⁾을 통해 누린 특혜를 포기하고 Auto 5000의 임금을 지역협약임금과 비슷한 수준으로 수용하는 등 Auto 5000과 광주형 일자리 모델 모두 연대임금 연대고용 지향

□ 경차 = 적자라는 상식을 깬 ‘동희오토’

○ 채산성이 낮은 경차모델 생산을 위한 위탁공장 모델

- 자동차부품회사인 동희그룹이 현대차 그룹 기아자동차와 합작, 위탁 자동차 생산공장 설립
- 경차는 정규직이 생산하면 채산성 맞출 수 없어 외주 위탁생산이

1) 산업별로 조직된 노동조합과 개별 기업 사용자 사이에서 행해지는 교섭

불가피하다는 경영진 요청에 기아차 노조도 동의

- 충남 서산 공장에서 2004년부터 모닝 생산 시작, 연간 30만대 생산 설비를 갖고, 모닝과 레이 등을 위탁생산
- 모기업인 기아차 공장의 2배에 가까운 생산성으로 성공적으로 경차 생산, 업계에서는 기아차보다 낮은 임금, 파업같은 노사분규가 없는 점을 고려하면 생산성 차이는 2배 이상으로 벌어진다고 평가

○ 노동계와 진보진영 일각에서 광주형 일자리의 실제 모델로 비판

- 관리직 직원은 정규직, 생산직 전원은 협력업체의 비정규직, 각각의 작업라인을 협력업체가 분담,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시스템
- 고용형태가 기형적인 ‘비정규직 공장’ 이라고 비판하는 입장과 벤츠를 위탁생산하는 ‘마그나 슈타이어’ 등 완성차 위탁생산은 미국, 유럽에서 오래전부터 이뤄진 방식이라고 옹호하는 입장이 교차

○ 광주형 일자리와 동희오토 비교

- 유사점 : 임금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하고 위탁생산 방식으로 생산단가가 낮은 경차 중심의 생산라인 가동
- 차이점 : 동희오토가 위탁생산 공장을 운영하나 광주형 일자리는 지자체인 광주광역시도 경영을 주도, 동희오토 생산직은 모두 비정규직이나 광주형 일자리는 생산라인을 모두 정규직 노동자들이 담당

2. 광주형 일자리 모델 경과

- 2014. 3. 31. 새정치민주연합 윤장현 시장 후보 ‘광주형 일자리’ 창출을 공약하며 출마선언
 - 노사와 지방정부가 양보하고 타협한 상생모델인 독일 ‘슈투트가르트 도시공동체 모델’을 모델로 하여 연봉 4천만원 이상 일자리를 1만개 이상 창출(‘윤장현 광주광역시장후보자 5개 핵심공약’ 中)
- 광주시, ‘사회통합추진단’ 출범, 한국노동연구원에 ‘광주형 일자리 창출모델 연구’ 용역, 다양한 노사민정 대화를 통해 ‘적정임금, 적정 근로시간, 원하청 관계개선, 노사책임 경영’ 4대 원칙 수립
 - 광주시가 현대자동차와 합작법인 설립, 2022년까지 빛그린산단에 연간 10만대 규모의 완성차 공장 완성하되, 경차 SUV 생산 우선 고려
- 문재인 대통령 후보 ‘노사민정 대타협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하는 광주형 일자리 모델을 전국적으로 확산’ 공약
 - 집권 後 대통령 직속 일자리 위원회는 ‘일자리 100일 계획’에 ‘노사상생형 일자리모델(광주형 모델) 확산 방안 마련’ 포함 발표
- 2018년 6월 초 현대차 그룹이 투자의향서 제출, 6월 19일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하는 자동차 생산을 위한 합작법인 투자협약 체결 예정이었으나 전격 취소

- 협상과정에서 노동계 배제·밀실교섭, 연봉 3000만원, 5년간 임금·단체협약 협상유예 등으로 알려진 협약내용에 대해 지역 노동계 반발
- 한국노총, 광주시에 협상과정 공개, 협상단에 노동계 참여 요청, 2018년 9월 결국 전면 불참 선언

○ 사회적 대화기구의 중재 등 노동계 설득으로 광주시, 노동계, 전문가들이 참여한 원탁회의 구성

- 6월 협약은 노사민정이 합의한 광주형 일자리의 기본 정신을 구현한 것이 아니라는 노동계 비판을 수용하는 바탕 위에서 현대차와의 협상 방향 재정립
- 2018. 10. 25. 원탁회의, 현대차와 투자협상 체계를 재구성하고 전문가 검토를 통해 투자협약서를 보완, 신속하게 협상에 나서기로 결정
- 광주시·노동계·전문가 등 8명으로 구성된 투자유치추진단은 11월 13일 ‘광주형 일자리의 성공적 실현을 위한 합의문’을 작성하고 광주형 일자리의 4대 원칙(적정임금, 적정노동시간, 노사책임경영, 원하청관계 개선) 재확인

○ 현대차의 기업적·경영적 요구와 거리가 먼 합의문에 대한 현대차 불신으로 합의 난항

- △적정노동시간은 하루 8시간(주 40시간), △임금수준은 노동자 초봉 평균 임금 3500만원으로 알려졌지만 합의문에 명시하지 않고, 법인

신설 후 논의, △신설법인 설립 후 5년 동안 실질적으로 노사협의회 개최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 불식 위해 노사협의 기능 확대, △임금교섭과 납품단가 연동 등 원하청 관계 개선 추진, (부품업계) 적정임금이 가능한 적정단가 보장하는 장치를 마련한다는 내용 포함

- 당초 현대차가 요구해 합의문에 포함된 ‘5년 동안 단체협약 유예, 임금과 물가상승률 연동’ 삭제 등으로 현대차는 적자가 불가피하다고 주장, 임금교섭과 납품단가가 연동된 원하청 관계 개선, 노동이 사제를 의미하는 노사책임경영에 대해서도 현대차가 수용에 난색

3. 광주형 일자리 모델의 의의와 한계

○ 중향평준화 연대임금·연대고용을 위한 사회적 실험

- 윤장현 광주시장 후보는 광주형 일자리의 기본 개념을 “기아자동차의 고임금과 하남공단의 저임금의 제3지대에 새로운 개념의 ‘광주모형’을 만들어 광주의 청년에게 좋은 일자리 제공”으로 정립
- 임금과 고용의 빅딜을 통해 고임금·저생산성의 대기업노조와 이중노동시장 등 한국경제의 모순과 질곡 극복

○ 전례가 거의없는 지자체 주도의 사회적 합의 추진

- 시민사회 출신, 기아자동차 전신 아시아자동차 부도시 희생 위해 뛰었던 윤장현 광주시장의 독특한 캐릭터, 경제발전에 대한 지역의 높은 열망, 진보적 시민사회가 발달, 정치권과 긴밀한 네트워크 형성

등 광주 특유의 정치지형이 노사민정 합의주의의 인프라로 작용

- 광주시 주도로 노사정 파트너십 구축, 시민사회와 지역사회가 광주 시를 지원하며 노사를 압박하여 합의주의 틀 내로 묶어 두는 구도

○ 광주형 일자리는 지자체 주도의 혁신모델로 노사 주도라기보다는 ‘동원’의 성격, 지자체가 지분의 21% 투자하고 KDB산업은행이 재무적 투자자로 참여 하는 등 지자체와 국책은행이 투자비용의 대부분을 감당하는 준공기업적 성격의 독립기업 등 여전한 관변적 속성

○ 최초 현대차와 합의과정에서는 자본편향을 보이다 지역 노동계가 반발하여 6월 합의가 무산된 이후에는 노동편향으로 기울어지는 등 중심을 잡지 못하며 좌초 위기를 자초하는 등 정치적 타산에 영향을 수밖에 없는 정치인 주도 모델의 한계 노정

- 대기업 유치를 호재로 삼아 재선을 노린 윤장현 前시장의 정치적 욕심과 이용섭 現시장의 조급증이 사태 악화를 가져왔다는 평가

○ 광주형 일자리를 고임금 기득권과 생산성이 낮은 귀족노조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고 11월 21일 현대·기아차 노조원 주력으로 총파업 투쟁을 전개하는 등 민주노총의 끈질긴 저지

- 최근에는 풍선효과를 들먹이며 울산 對 광주의 소지역주의 대결 구도 소환, 울산 공장 노조와 지역민의 반발 유도

[작성: 김원표 수석연구위원 ☎ 02-6288-0558]

Ⅱ. 생계형 일자리로 내몰리는 노인들¹⁾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개선방안

우리나라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은 OECD 회원국 중 1위, 65~69세 고용률은 45.5%로 EU 28개국보다 높은 수준임. 노인의 대부분이 근로소득으로 생활비를 충당하고 있는 가운데 고령층 일자리 대안 중 하나인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점이 다방면에서 제기되고 있음. 초고령사회를 목전에 둔 시점에서 급증하는 노인일자리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시장형 일자리 확대 방안 및 관련법 재·개정 등 현실적인 정책 마련이 필요함.

1. 노인 빈곤율 및 고용률 현황

○ 우리나라 노인(66~75세)의 상대적 빈곤율²⁾은 42.7%, 76세 이상 노인의 빈곤율은 60.2%로 OECD 38개국 중 가장 높은 수치³⁾

- 65세 이상 노인의 소득만족도는 ‘불만족’ 이 55%로 ‘만족’ (8.1%) 대비 7배에 달하는 수준임

- 취업 희망율은 전년(62.6%) 대비 1.5%p 증가한 64.1%
- 지난해 고령자(65세 이상) 생활비 마련방법은 ‘본인 및 배우자 부담’ 이 61.8%로 가장 높음
- 취업 희망 사유로 ‘생활비 보탬’ 이 59.0%로 1위를 차지함⁴⁾

1) 본 보고서는 한국노인인력개발원 2017 노인일자리 통계 동향(2018.6)을 참고하여 작성함

2) 상대적 빈곤율은 소득이 중위소득 50% 미만인 계층이 총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 상대적 빈곤율이 높으면 가난한 계층의 인구가 많은 것으로 해석함

3) OECD, 2017 불평등한 고령화 방지 보고서, 2017.11

4) 통계청, 2018 고령자 통계, 2018.9.27

○ 연금 10~25만원 미만 수령자는 42.9%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으며, 100만원 이상 수령자는 14%에 불과⁵⁾

- 노인 대부분 근로소득으로 생활비를 충당할 수밖에 없는 현실

○ 지난해 고령자 고용률은 67.5%로 전년 대비 1.4% 상승⁶⁾

[그림1] 고령층(55~74세) 고용률 추이

(단위: %)



출처 : 통계청, 2018 고령자 통계

- 우리나라 65~69세 고용률은 45.5%로 EU 28개국보다 높은 수준
 - 노인 고용률은 높지만 소득수준에서는 유럽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
- 우리나라 노인의 경우 생활 기반이 불안정하고 노후대비가 미흡하기 때문에 생계형 일자리에 급급할 수 밖에 없어, 고령층의 고용률 상승은 불가피한 현실

5) 통계청, 2018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 결과, 2018.7.24

6) 고용노동부, 고령자 고용동향, 2018.10.16

2.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기 실태

<표1>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유형별 현황

유형		내용	대상	지원	월평균임금 ('18년, 만원)	일자리 (만개)
노인 사회 활동 (공익형)	공익활동	노노케어, 보육시설 봉사 등 지역사회 공익증진 23개 프로그램	기초연금 수급자	월27만/9(12)개월 활동비	27	37.5
	재능나눔 활동	노인의 전문자격·경력을 활용한 노인 권익증진 활동	만65세 이상	월10만/6개월 활동비	10	5.2
노인 일자리 (시장형)	시장형 사업단	실버카페, 반찬가게 등 제품 제조·판매, 서비스 제공 사업을 통해 수익 창출	만60세 이상	연210만원 사업비	30	4.9
	인력파견형 사업단	가사·간병인, 경비원, 지역일손 도우미 등 수요처에 파견 지원		연15만원 사업비	126	2.3
	시니어 인턴십	민간기업 인턴기회(3개월) 제공 후 계속 고용 유도		1인당 연 최대 300만원 인건비	156	0.8
	고령자 친화기업	노인 적합업종 분야 내 다수의 고령자를 고용하여 운영할 기업을 지원		최대3억원 사업비	95	0.2
	기업 연계형	기업과 함께 노인일자리 창출 모델 개발 및 관련 설비·서비스 등을 지원		연 최대 250만원 사업비(설비 등)	163	0.4

출처 : 김승희 의원실 자료(재정리)

*예산지출 : 1조2558억원(국비 6366억원, 지방비 6192억원)

□ 위험천만한 저임금 노인사회활동(공익형)⁸⁾

○ 신체적 한계 고려되지 않는 공익형 일자리

- 2013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노인일자리사업 관련 사망자수 26명⁹⁾

※ 11.20 광주 북구 모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 위 ‘스쿨존 교통지도’ 중이던 정모(76·여)씨는 수학여행 관광버스에 치어 사망

※ 6.22 경남 양산시 70대 노인 3명은 인솔자 없이 마을 쓰레기·낙엽

7) 이하 노인일자리사업으로 표기

8) 노인사회활동(공익형)은 공익형 일자리, 공익형 사업으로 표기

9) 김승희 의원실 자료(한국노인인력개발원)

치우는 일을 마치고 도로변에서 휴식을 취하던 중 승용차가 도로 변을 덮쳐 모두 사망

- 스쿨존 교통지도, 주·정차 계도, 생태·환경 개선 등의 외부활동으로 이뤄진 공익형 일자리의 경우, 더위와 추위에 취약하고 사고에 노출되기 쉬우므로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로 보기 어려움
- 저소득층, 전문기술 없는 고령의 노인이 참여할 수 있는 일자리는 사실상 공익형 일자리로 제한됨
 - 공익형 사업은 연령 상한선 제한없이 비교적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노인이 참여하고 있지만 월급은 27만원으로 시니어인턴십에 비해 6분의 1 수준에 불과

□ 양적성장 급급한 노인일자리사업

○ 노인일자리사업은 2004년 사업 개시 이후 큰 폭의 양적성장 달성

- 2004년 3만5000개 → 2018년 51만개 (14배 양적성장)
 - ※ 文정부는 내년 노인일자리에 1조 6000여억원을 들여 61만개 이상 일자리 확대 방안 제시
 - 예산 편성이 많은 공익형 일자리가 노인일자리사업 양적성장의 대부분을 차지
 - 2018년 노인 일자리 예산 인상률에서 공익활동 수당은 월 22만원에서 27만원으로 22.7% 인상되었지만, 시장형사업단 사업비는 연 20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5% 인상에 그침
- 올해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희망자 119만5000명, 노인일자리 수는 51만명에 불과해 노인일자리 수요충족률은 42.7%에 그침

- 노인일자리 수는 양적성장을 이뤘지만 여전히 일자리사업 참여희망 노인의 절반도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며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시점에서 획기적인 확대가 시급함

□ 지속가능한 일자리 부재

○ 노인일자리사업은 짧은 활동기간과 저임금으로 질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제기됨

- 공익활동, 재능나눔 활동 등 기간이 정해진 공익형 사업을 제외하고 평균 참여기간이 매우 짧음
 - 작년 기준 인력과전형사업단 5개월, 기업연계형 9개월 미만 참여자가 전체 64% 차지함
 - 시장형사업단 8.4개월, 고령자친화기업 6.5개월 등 일자리 연속성이 1년은 넘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임
- <표1>과 같이 공익형 사업과 시장형사업단은 월평균임금 수준이 30만원 이내로 14년째 제자리에 머물러 있음
 - 고령층(55~79세) 장래 희망 급여수준은 150~300만원 미만이 45.6%로 가장 높게 나타남
 - 고령층의 희망 급여수준과 노인일자리 대부분을 차지하는 공익형 일자리 임금은 산술적으로 100만원 이상의 차이를 보이며 희망임금과 실제임금간 괴리가 큼을 알 수 있음
- 공익형 사업, 시장형사업단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은 90~100만원을 상회하는 임금을 지급받지만 평균참여기간이 짧아 안정적인 일자리로서의 역할이 어려움

□ 노동관계 법령 적용 문제

- 노인사회활동(공익형)은 「노인복지법」에 근간을 두고 있어 근로자성 인정 여부에 대한 논쟁 공방이 치열함
 - 공익형 사업 참여 노인의 경우 근로자로 규정되지 않지만, 근로기준법에 근거하여 공익활동에 따른 임금을 받는 노인도 엄연한 근로자로 인정받아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 공익형 일자리에 근로자성을 인정할 경우 사업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수행기관이 사용자로 규정되어 어린이집 설치 의무화 등 불필요한 법적 의무사항이 생겨 과도한 책임이 지워지는 상황
- 시장형사업단, 인력파견형사업단은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 법령 및 사회보험 가입을 준수하여 퇴직금, 실업급여, 근로세액공제, 주휴수당 부담까지 떠안아야 하는 실정
 - 정부, 지자체로부터 위탁받아 사업을 수행하는 복지적 성격의 수행기관은 수익증대의 어려움과 더불어 턱없이 부족한 정부 지원액으로 폐업 수순을 밟는 경우가 생김
 - 2019년도 기준 시장형 사업단 임금 예상안을 보면 월 60시간 근로 참여노인을 1년간 고용하는 경우 수행기관은 1인당 월 74만원, 연 890만원의 인건비를 부담해야 함¹⁰⁾
 - 2018년 기준 시장형사업단 예산지원은 1인당 연간 210만원으로 매년 급격하게 인상되는 최저임금을 감당할 수 없음
 - 경비원과 같은 단순노무직 고령층은 최저임금 급상승으로 인해 해고될 경우 청년층에 비해 재취업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

10) ‘시장형 노인일자리 사업의 노동관계법상 문제와 개선방안’ 토론회 발제문 참조, 2018.8.21

3. 시사점 및 개선방안

- 2026년 고령인구가 총인구의 20%를 초과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예정이므로 노인일자리사업 보완책 마련 등 현실적인 노인 일자리 대책이 시급함

□ 안전보장 없는 공익형 일자리 개선

- 노인일자리사업 시행 이후 양적성장을 달성했지만, 성장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공익형 일자리는 적은 예산을 투입해 사업의 양적 증가를 도모한 측면이 큼
 - 기본적으로 저소득층 노인에 국한되어 있는 공익형 일자리는 생계유지에 턱없이 부족한 임금이라는 지적이 있음
 - 사업성과 위주의 실질 소득이 보장되는 시장형 일자리 확대방안 마련이 시급
 - 노인의 신체적 특성을 무시한 채 외부활동이 이뤄지는 공익형 일자리의 경우 열악한 교육 여건, 관리 인력 부재, 연령 상한선 등의 안전성 문제가 거론됨
 - 충분한 안전교육도 하지 않는 불필요한 일자리 투입을 중단하고 안전대책이 있는 일자리를 창출하여 질적 성장을 목표로 해야 함
 - 내년도는 올해보다 10만개 이상의 노인일자리 창출, 예산 편성 증가 등 일자리의 양적증가가 예상되지만, 보다 안전한 노인일자리 마련이 우선되어야 할 것임

□ 시장형 일자리 확대 방안

- 급상승하는 노인일자리 수요를 예산의 상당량이 편성되는 공익

형 일자리로 충족하기에 어려움이 많으므로 노인의 자립이 가능한 시장형 일자리 확대 필요

- 고령자친화기업, 기업연계형과 같이 시장형 노인일자리사업은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전환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사업에서 장기적인 핵심정책으로 발전
 - 성과가 우수한 시장형사업단을 선별하여 고령자친화기업으로 전환하여 자립형 사업 모델 창출
 - 시장형사업단이 고령자친화기업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전문가와 매칭하여 준비단계(제품개발)과 판로개척 등 과정 지원
 - 추가적으로 공익형과 시장형 사업비의 지원기준을 일원화하여 차별 없는 지원 필요
- 노인일자리사업 유형에 따라 활동기간 및 임금을 차등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참여 노인의 경제적 욕구와 활동내용에 부합할 필요가 있음
 - 노인일자리사업 대상자 및 수행기관을 대상으로 희망임금과 비용 지불 의사를 측정하여 정책 반영 필요
- 노인일자리정책의 우선순위를 빈곤 완화보다는 사업 수행으로 파생되는 성과를 목표로 하여 실질적인 소득이 보장되는 시장형 일자리 분야를 더욱 확대 필요

□ 관련법의 재·개정 필요

- 노인일자리사업 관련 법률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제외하면 「노인복지법」 제23조에만 근거하고 있어 수행기관에 법적 책임의 대부분이 돌아가는 상황

- 근거법령인 「노인복지법」 내 노인일자리사업에 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실효성 있게 담거나 예외조항 명시 필요
- 특히 예외 조항을 통해 수행기관 중 비영리기관은 노동관련법의 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함

<표2> 노인일자리사업 관련 의안

의안 번호	의안명	제안일자	결과
2007143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인재근의원 등 12인)	2017/05/31	소관위 접수
2003496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천정배의원 등 12인)	2016/11/11	소관위 접수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 제20대 국회에 제출된 ‘노인’ 관련 113개 의안 중 위 의안은 특례조항으로 일부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노인에게 관해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로 보지 않도록 한다는 유의미한 내용을 담고 있음¹¹⁾
- 이러한 의안을 근거로 수행기관의 부담 완화에만 국한시키지 않고 참여 노인의 법적지위와 조건 등 권리보호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켜야 함
- 시장형사업단의 경우, 고용노동부는 연계법안 체계를 개선하여 각 노동관계 개별법령에서 예외조항을 두어 최저임금 인상, 고용보험 등 수행기관이 떠안는 재정적 부담 감소 필요
- 객관적인 노동력 산출을 통한 인건비 책정과 정부 지원으로 차등적인 임금 지급
- 노동·사회보험관계법령의 적용에 예외를 두는 방안과 사업수행에 적정한 보조금 지급 방안 마련 필요

[작성: 김영현 연구원 ☎ 02-6288-0532]

11) ‘시장형 노인일자리사업의 노동관계법상 문제와 개선방안’ 토론회(2018.8.21.) 발제문 참조

Ⅲ. 왜 미국 중간선거에서는 가짜뉴스가 없었나

2017년 5월 촛불혁명, 인터넷 민주주의를 외치며 탄생한 문재인 정권은 온라인 상의 정부에 비판적인 게시물에 대해 지속적 탄압을 가하고 있음. 2018년 1월 민주당의 네티즌 고발로 오히려 민주당과 드루킹의 여론조작 공생관계가 드러났으며, 구글과 방심위에 정권에 불리한 내용이 담긴 게시물의 삭제를 요청하였으나 ‘해당없음’이라는 판정을 받기도 함. 반면, 미국은 지난 11월 중간선거에서 IT 기업의 자율 규제에 맡김으로 인해 오히려 가짜뉴스가 줄어드는 효과를 가져왔음.

1. 문재인 정권에 대해 말만하면 ‘가짜 뉴스’ 다?

- 문재인 정권, 표현의 자유에 가짜 뉴스라는 프레임 씌움
 - 특히 법무부, 경찰, 방통위 등 쏠 정부기관을 동원하고 있음
- 민주당, 유튜브 동영상 104건 삭제 요청 → 구글 거부
 - 민주당 의원은 지난 10월 유튜브(구글코리아) 본사를 직접 항의 방문해 104개 동영상을 ‘가짜뉴스’ 라며 삭제 요청하였으나, 구글은 자체 규정에 따라 ‘위반사례 없음’ 으로 삭제 거부
- 경찰, 23건 온라인 동영상에 대한 무리한 삭제 요청 → 방심위 조차 거부
 - 경찰은 사회통합 및 질서 저해를 이유로 방심위에 삭제 요청하였으나, ‘해당없음’ 결정으로 이를 수용하지 않음

2. 미국 기업의 자율규제 사례

○ 페이스북 : 24시간 상황실 운영, AI 모니터링, 의심계정 삭제

- (24시간 상황실) 중간선거 대비 ‘워룸(War Room)’ 이라는 특별 대책 TF를 구성하여 데이터 및 보안 전문가, 위조 정보 모니터링 등 시행
- (AI 모니터링) 2017년부터 인공지능(AI)과 사람을 거치는 2단계 팩트 체크 시스템을 도입, 제3의 중립적 기관과 협력하여 머신러닝과 인공지능 팩트체크 시스템 운영
- (정치광고 실명제 도입) 특정 정치이슈에 대한 포스팅 또는 타겟 광고를 할 때 광고비를 낸 주체를 밝히고 신원 검증 절차 거쳐 승인 받지 않은 광고주는 선거·현안 관련 정치 광고 게재를 금지하며, 광고에 ‘정치광고’ 라벨을 붙임

○ 트위터 : 계정주 식별정보 제공, 허위 계정 삭제조치

- (계정 주 식별정보 제공) 사용자가 합법적인지 여부를 알리는 라벨을 붙이는 서비스를 시작하여 트위터상의 정보에 대해 출처를 식별하게 함으로써 사용자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정책을 시행함
 - 중간선거에 출마한 주지사, 상·하원 후보자 트위터 계정에 공식 라벨을 제공하고, 대표 지역구에 대한 정보를 트위터 프로필과 트윗 상단에 바로 배치
- (가짜계정 삭제조치) 자체적으로 의심 계정을 매일 100만개씩 차단, 중간선거 직전인 5~6월 두 달 사이 7000만개의 악성 트윗 또는 스팸트윗을 삭제

○ 구글 : 인공지능 필터링, 정부기관 협업 의심계정 삭제처리

- (인공지능 필터링) 구글 뉴스는 정확한 속보 제공, 기자의 정확한 기사 작업을 돕는 기술개발 등을 위해 3년 동안 3억 달러를 투자할 예정이며 가짜뉴스를 필터링 하는 자체 인공지능 알고리즘 개발 및 기술의 정확도를 높이는 방향에 중점을 두고 있음

○ 애플 : 독립적 에디터 특별 페이지 직접 관리

- (독립적 에디터가 특별 페이지 직접 관리) 중간선거에 대비하여 ‘신뢰 언론사’ 리스트를 정치면 상단에 제공함과 동시에 워싱턴포스트, 약시오스, 폴리티코 등 대형 전문저널을 위한 특별 공간을 마련하여 독립적 에디터에 의해 수작업으로 선별 된 기사 제공

3. 시사점

○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은 2018년 1월 ‘정부 비판 댓글이 조작된 혐의가 있다’ 며 네티즌을 고발하였으나 오히려 드루킹 여론조작과 공생관계였다는 사실이 드러났음

- 이후로도 정부와 여당은 정권에 반대의견을 내는 인터넷 게시물 삭제 요구 위한 구글 항의 방문, 경찰의 방심위 게시물 삭제요청 등 지속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음

- 미국은 정부의 개입보다는 IT 기업의 자율규제를 기본 방침으로 두고 있으며, 기업 역시 해당 계정 사용자의 책임을 강조하고 인공 필터링을 사용함으로써 기업 스스로도 개입을 줄이고 있음
- 정부의 직접 개입 보다는 IT 기업의 자율성과 책임성에 초점을 맞춰야 하지만 선거과정에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부분은 IT 기업과 유관 기관의 협업 체계 구축이 필요함
- 장기적으로 제2의 드루킹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IT기업과 매크로 조작의 공생 관계를 끊을 수 있도록 IT기업에게 방조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해야 함

[참고자료 - 해외자율규제 사례]

① EU(유럽연합) : 플랫폼 사업자 자율규제 강화

-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는 ‘거짓정보에 대한 실천강령’ 을 만들어 주요 플랫폼 사업자에 권고하였으며 실효성 있고 실천 가능한 자율규제 방안을 스스로 만들어 제출하게 함

② 독일 : 소셜네트워크법 개정, 페이스북 자율규제

- ‘소셜네트워크법’ 은 ‘가짜뉴스 처벌법’ 이 아니며, 이미 법제화된 형법상의 불법(인종혐오 등)에만 해당되나 이 조차도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아 의회차원의 개정 검토 중임
- 독일의 페이스북은 자율규제에 방점을 두고 전문 담당자가 관리하는 모니터링 및 삭제센터를 베를린과 에센지역에서 운영 중임

③ 영국 : 독립적 제3의 기구 구성

- 페이스북과 트위터는 영국내 제3의 독립 기관이 허위조작정보 모니터링을 담당하는 자율규제 방안 확대중, 특히 페이스북은 영국의 자연어처리 기술업체인 블룸즈버리AI를 인수하여 머신러닝과 AI분야의 기술개발 및 인재영입을 통한 방안을 확대하고 있음

④ 싱가포르 : 사회적 협의체 구성

- 전문가·시민·기업·국회가 협의체를 구성하여 ▲ 허위사실 관련 정보공개 및 예방홍보 ▲ 언론매체의 공정성·정확성·무결성을 보장한 저널리즘 제고 ▲ 플랫폼 사업자들의 투명성 제고, 자발적·독립적 감사 진행 권고안 도출

[작성: 김신의 연구원 ☎02-6288-0535]

자유한국 i 노믹스(inomics) 해설

2018. 12

김창배 연구위원 (inforum4@naver.com)

1. 개요 : 자유한국 i 노믹스(inomics) / 1
2.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 i / 3
3. 뛰지 못하는 위대한 i / 5
4. 위대한 i 의 발목 잡는 J 노믹스 / 11
5. 위대한 i 를 다시 뛰게 하는 i 노믹스 / 13
6. 결어 : '우리는 어떤 국민인가' / 17

이 보고서는 지난 11월 19일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가 발표한 '자유한국 i 노믹스 (inomics)' 내용을 정리하고 해설한 것으로 보고서의 내용은 자유한국당과 여의도연구원의 공식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요 약 》

- i 노믹스는 자유시장경제라는 틀 위에 ‘국민의 위대함’을 성장 동력으로 만드는 것으로 기존 국가주의 패러다임의 대 전환 의미
- 우리 국민은 높은 성취욕구와 열정, 높은 혁신역량과 강한 도전정신, 높은 공공선 의식과 공동체 정신을 가진 위대한 i 임. 한강의 기적, 민주화, K-Pop 등 글로벌 문화강국이라는 우리 역사가 증인
- 그런데 위대한 i 가 뛰지 못하고 있음. 새로운 성장모델을 찾지 못한 채 경제성장 엔진은 식어가고 있고 사회는 장기 저성장의 후유증으로 시름과 절망의 늪에 빠져 있음.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대한 기술혁신 파고에 뒤쳐진 준비로 불안한 미래에 직면하고 있음
- 설상가상, 문재인 정부는 위대한 i 의 발목을 잡고 있음. 반시장적 정책을 강행하고 소득주도성장을 고집하며 과도한 복지, 땀질 세금 처방으로 미래세대의 부담만 급등시키고 있음. 귀족 노조 등 반개혁적 세력에 포획되어 미래를 위한 개혁마저 후퇴시키고 있음
- 이제 i 를 다시 뛰게 해야 함. △위대한 국민을 믿고 i 가 마음껏 뛰도록 규제를 풀고 △ i 를 위해 불공정·특권 구조를 바로 잡고 △ i 의 성장역량을 키우고 도약의 미래를 여는 정책을 추진해야 함
- 지금의 i 아이노믹스는 완성이 아니고 오히려 시작. 개개인의 혁신역량이 성장을 견인하는 경제, 그 꿈을 만들어가고 또 실현가능하게 하는 기반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구축해야 함
- i 노믹스는 ‘당신은 어떤 국민인가’를 묻는 것에서 기존 경제정책과 근본적인 차별성을 가지며 이곳에 출발하여 우리 국민의 대단함을 확인, 다시 한번 도약의 기회를 맞이하게 될 것임

1. 개요: 자유한국을 위한 i 노믹스(inomics)

-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11월 19일 새로운 성장담론으로 i 노믹스(inomics) 제시
 - i 는 ‘나’ 를 뜻하며 idea(아이디어), initiative(주도), invention(창조), innovation(혁신)이라는 복합적 의미 포괄
- i 노믹스는 자유시장경제라는 틀 위에 ‘국민의 위대함’ 을 다시 성장의 동력이 되게 하는 것으로 기존 국가주의 패러다임의 대 전환 의미
 - “지금은 개개인의 대단한 역량이 ‘성장엔진’ 인 시대”
 - 따라서 “자유, 자율, 창의의 정신이 넘치는 자유시장 경제질서 위에서 위대한 국민을 마음껏 뛰게 하는 것” 이 진짜 성장론
 - 이를 위해 국가는 ‘주도자(主導者)’ 가 아닌 ‘촉진자(促進者)’ 로서 공정, 배려, 형평의 정신에서 보완적·보충적 기능에 충실하게 제도와 환경 정비
 - 국민을 어리석고 부족한 백성으로 보고 모든 것을 국가권력으로 규제하고 보호하려 드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과는 대립되는 개념

<표1> J 노믹스와 i 노믹스 개념 비교

	J 노믹스	i 노믹스
경제운용	정부중심/국가주도 국가주의	민간중심/개인주도 자율주의
성장동력	국민소득(주로 이전소득)	개인의 혁신역량
국민觀	규제·감독·보호·대상	자율·창의·혁신의 주체
정부역할	Director (주도자) ⇒ 국민 삶과 시장에 직접개입	Catalyst (촉진자) ⇒ 자율 공정 시스템 구축, 지원
정책기조	- 소극적 규제 완화 - 시장 불신, 시장개입 - 기업 옥죄기 : 규제 강화 - 산업정책 부실 - 이익 집단 영합 포퓰리즘 - 정부 보조금(복지) 의존 강화	- 적극적 규제완화 - 시장신뢰, 공정성 강화 - 기업 활동 자율 - 산업 및 경제의 디지털화 - 특권구조 타파 - 생산적 복지 통한 자활 강화

○ i 노믹스는 i가 마음껏 뿔 수 있는 국가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믿고 풀자!’, ‘바로 잡자!’, ‘키우고 열자!’ 라는 3대 정책 기조 제시

- 위대한 국민을 믿고 i가 마음껏 뛰도록 풀자!

- 과감한 규제개혁과 경제정책의 분권화를 추진해 자율과 창의의 국민역량이 자연스러운 성장의 원동력이 되게 함

- i 를 위해 불공정·특권 구조를 바로 잡자!

- 공정한 기회 보장을 위해 제도와 환경을 개선하고 성장의 과실이 사회경제적 약자에게 골고루 나누어지도록 해 성장 활력 확산

- i 의 성장역량을 키우고 도약의 미래를 열자!

- ‘사람과 기술에 대한 투자’ 확대, ‘성장 사다리’ 강화, 여성·청년·미래세대 주도 사회 조성 등을 통해 성장의 지속 가능성 제고

<표2> i 노믹스의 3대 정책기조와 정책 과제

	3대 정책기조	정책과제
i 노 믹 스	위대한 국민을 믿고 i 가 마음 껏 뛰도록 풀자!	스타트업·벤처·기업을 위한 과감한 규제개혁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제정책 결정의 분권화
	i 를 위해 불공 정·특권 구조를 바로 잡자!	근로취약층·중소기업을 위한 특권구조의 해체
		비정규직·협력업체를 위한 이중 노동시장의 개혁
		세금부담을 짊어질 미래세대를 위한 공공부문 개혁
		공정한 기회에서 배제되는 국민을 위한 사회투자 강화
	i 의 성장역량을 키우고 도약의 미래를 열자!	국민과 함께하는 국정거버넌스 혁신
		창의적 인재육성을 위한 대학 및 교육 개혁
		혁신역량 축적을 위한 국가R&D체계 정비
		신성장동력 육성을 위한 Three Valley 조성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성장사다리 강화
		미래성장 주체가 될 여성·청년·미래세대 주도 사회 조성

2.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 i

- 정치는 국민에게 새로운 꿈을 만들고 제시해야 하며 그 꿈의 시작은 우리 국민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인식하는 데서 출발해야 함
- 우리 국민은 높은 성취욕구와 열정을 가진 국민
 - 무엇이든 목표를 정하면 세계 어떤 국민보다 더 높은 성취욕구와 높은 열정을 가지고 목표를 달성해 왔음
- 우리 국민은 높은 혁신역량과 강한 도전정신을 가진 국민
 - 웬만한 서비스, 웬만한 제품에 쉽게 만족하지 않는 까다로움이 탁월한 혁신역량과 강한 도전정신의 바탕이 되었음

- 우리 국민은 높은 공공선 의식과 공동체 정신을 가진 국민
- IMF의 금융위기가 닥치자 앞 다투어 장롱 속의 금을 모아 위기 극복에 힘을 모은 국민

○ 위대한 우리 국민이야말로 무엇으로도 대체 불가능한 가장 강력한 성장 엔진이었음을 지난 역사가 증명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자원도 거의 없는 좁은 국토에, 분단으로 인해 사실상 섬처럼 고립되어 있고, 식민지배와 전쟁의 참화까지 겪었던 세계 최빈국이었음
- 하지만 ‘한강의 기적’ 이라는 산업화와 경제발전 신화를 창조하면서 이제는 자동차, 스마트폰, 전자제품, 화장품에 이르기까지 ‘메이드인코리아’가 세계 시장을 점령하는 글로벌 경제대국으로 성장
- 또한 우리 국민은 4.19혁명, 6.10항쟁 등 역사의 고비마다 올바른 역사의식으로 국가공동체가 나갈 방향을 온몸으로 제시하며 민주화에도 성공, 국민에 의한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만들어 냄
- 나아가 이제는 K-Pop과 K-Drama 등 새로운 문화를 창달하고 전 세계에 전파하는 글로벌 문화강국이 되었음

3. 뛰지 못하는 위대한 i

① 새로운 성장모델을 찾지 못한 채 성장엔진이 식어가는 한국경제

□ 끝없는 성장률 추락

○ 2010년대 이후 세계경제 성장률을 하회하는 한국경제 성장률

- 2011~17년 중 세계경제가 3.6% 성장할 때 한국경제는 3.0%에 그침

- 2018년에도 ‘나홀로’ 하락세를 보이는 우리 성장률

- 우리나라의 올 성장률은 대체적으로 2.8~2.7% 정도로 2016년 대비 0.1%~0.2포인트 낮아질 전망. 반면 브렉시트로 어려움을 겪는 영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선진국은 2016년보다 2018년에 더 높은 성장률 예상

□ 고용 창출력 저하

○ 제조업의 생산증가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고용은 정체 수준

- 2017년 제조업 생산은 2004년 대비 약 84% 증가한 반면 제조업 고용은 동기간 중 9.3% 증가에 그치며 ‘고용 없는 성장’ 현실화

○ 제조업의 고용창출능력 저하는 영세 자영업자 과잉으로 이어짐

- 92년 26.2%였던 제조업 고용비중이 2017년에는 16.7%로 하락

- 자영업 비중은 2016년 기준으로 25.5%로 OECD국 중 최고 수준

□ 주력산업 경쟁력이 저하되며 수출 둔화 가시화

○ 올 들어 반도체 등 거의 대부분 주요 산업 수출 악화

- 반도체(2017년 57.4% → 2018년 1~9월 39.4%, 이하 동기간), 석유화학(23.6% → 16.3%), 철강(19.9% → 7.0%)은 증가율 둔화
- 선박류(23.1% → -57.7%), 자동차(3.8% → -5.1%)는 감소세로 반전
- 무선통신기기(-25.5% → -17.6%), 액정디바이스(-0.5% → -20.6%) 감소세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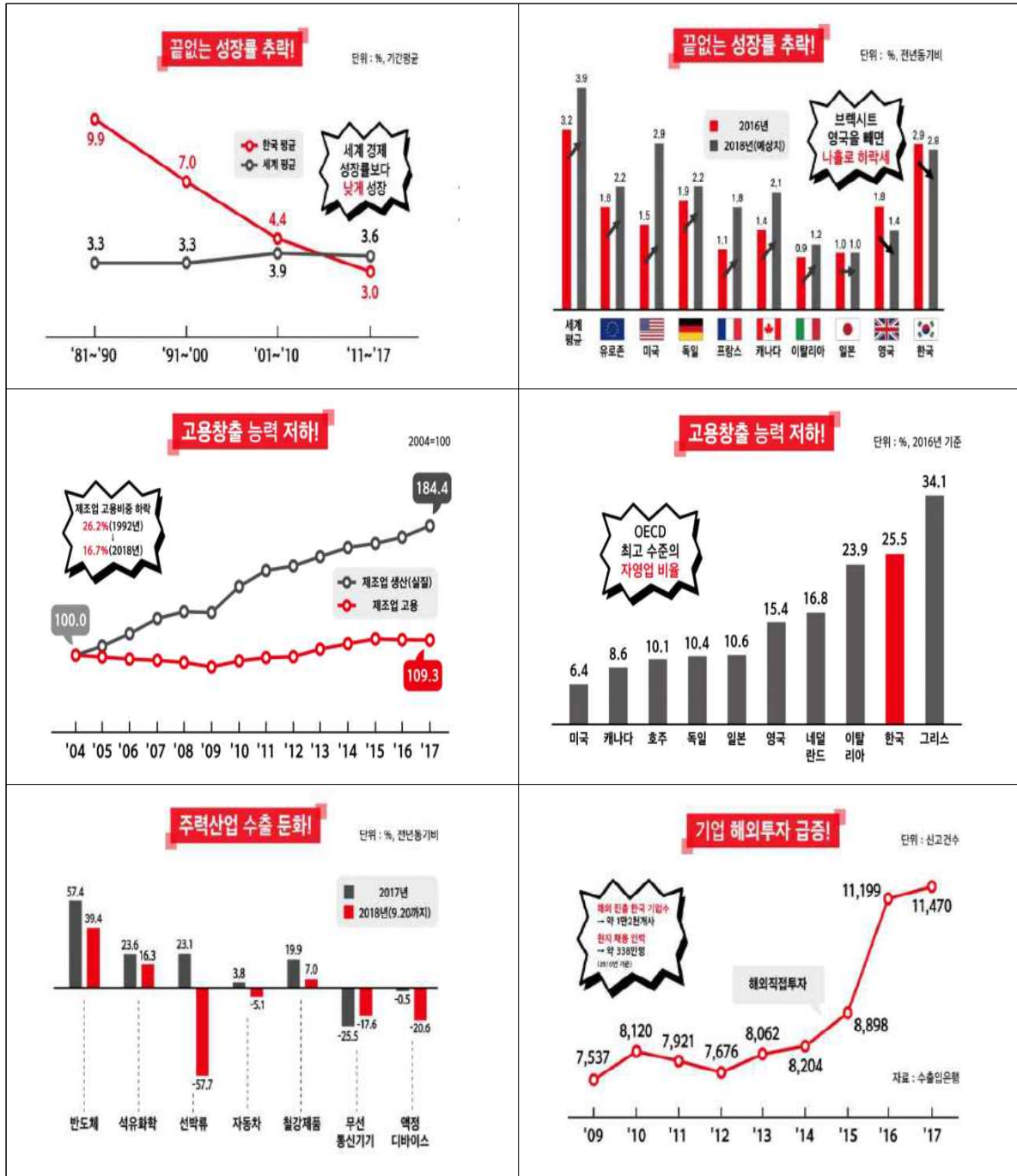
○ 수출을 견인한 반도체도 경기 정점이 지난 데다, 미·중 무역분쟁 등의 영향으로 향후 주력산업의 수출은 더 어두워질 전망

□ 기업의 해외탈출 급증

○ 기업 여건 악화 등 다양한 이유로 국내를 벗어나 해외로 투자를 늘리는 기업 수 급증

- 해외 직접투자 건수는 신고기준으로 2009~2015년 평균 연간 약 8,000건대에서 2016~2017년에는 약 11,000건대로 큰 폭 증가
- 한국경제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2016년 기준 해외진출 한국 기업 수는 약 1만 2천개 사, 현지 채용인력은 약 338만명으로 추산됨. 그만큼 국내 일자리가 사라짐

[그림1] 성장엔진이 멈춘 한국 경제



② 장기 성장의 후유증으로 시름과 절망에 빠진 한국 사회

○ 분배구조가 악화되고 대립과 갈등이 격화되며 국민 삶의 질은 추락하고 우리 사회는 절망과 시름의 늪으로 빠지는 모습

- 올 들어 소득분위별 소득 격차가 더욱 심화

- 올 2분기 소득 최하위 20%인 1분위 소득은 7.6% 감소한 반면 최상위계층인 5분위는 10.3% 증가
- 3분기에도 1분위는 7.0% 감소한 반면 5분위는 8.8% 증가하며 소득격차 확대현상 지속

<표3> 소득 5분위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증가율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1,317.6	-7.0	2,842.8	-0.5	4,147.5	2.1	5,691.1	5.8	9,735.7	8.8

자료: 통계청 2018년 3/4분기 가계동향조사

- 과도하게 높은 대기업 임금으로 인해 대중소기업간 임금 격차 문제 심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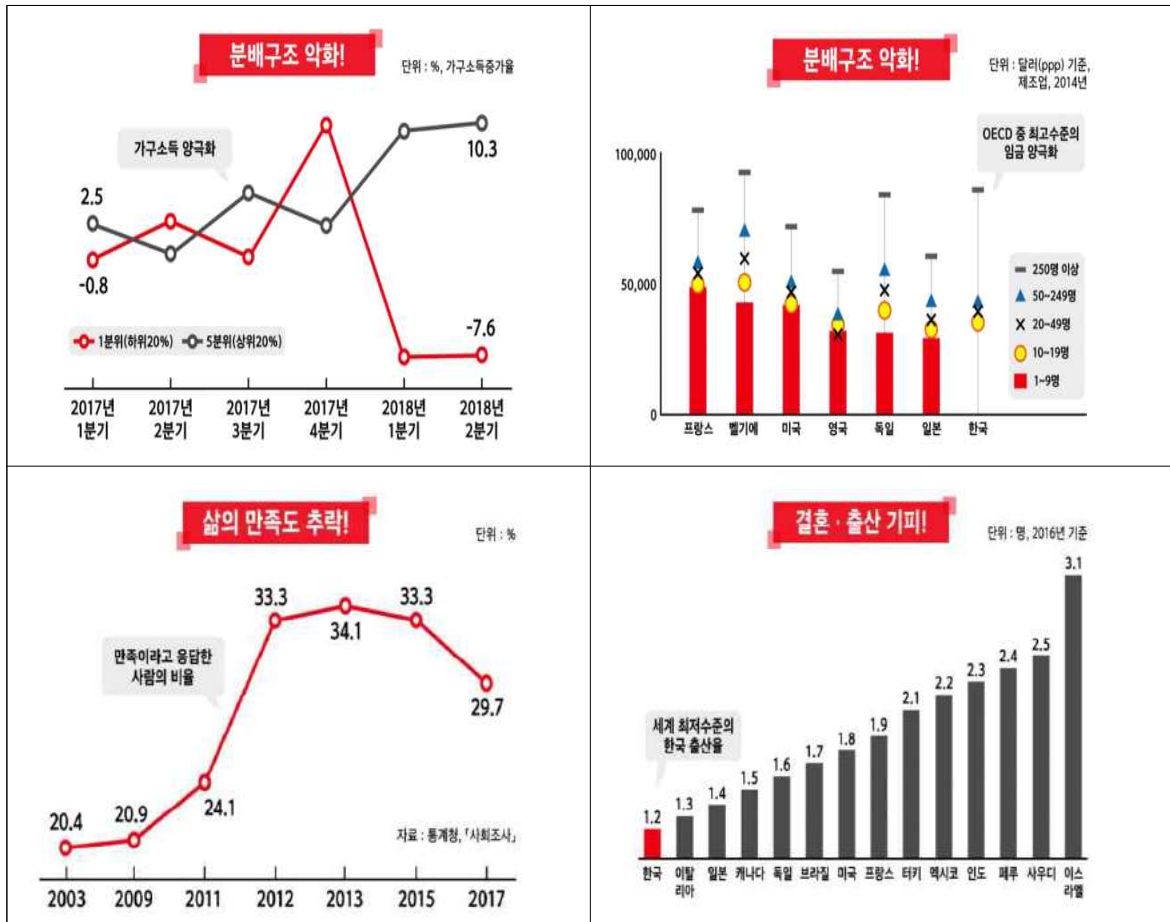
- 한국 제조 대기업¹²⁾ 임금(PPP기준)은 86,165달러로 벨기에(92,431달러)에 이어 2위로 독일(83,996달러)보다도 높고 미국(71,913달러), 일본(60,821달러) 보다는 훨씬 높은 수준
- 반면 중소기업(10~49인)의 임금은 OECD 평균 수준

- 통계청 사회조사에서 자신의 삶에 대해 ‘만족’ 이라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이 2013년(34.1%)을 정점으로 하락세

12) 한국은 300인 이상

- 결혼·출산 기피가 확대되면서 2016년 기준 한국의 출산율은 약 1.2%로 세계 최저 수준 기록

[그림 2] 시름과 절망에 빠진 한국사회



③ 밀려오는 거대한 기술혁신 파고 속에 뒤처진 우리 준비

○ 인공지능, 블록체인, 사물인터넷 등 4차 산업혁명이라 불리는 거대한 기술혁신의 파고가 밀려오며 정치·경제·사회적 대변화를 만들어 내고 있음

- 고용 없는 성장, 저출산, 초고령화, 탈권위·탈집권화 등 전세계적 경제·사회적 변화가 거세지고 있는 상황

- 뿐만 아니라 경제·산업질서도 크게 변하게 하고 있음

- 미·중 新패권경쟁, 보호무역주의 등으로 세계경제질서가 요동치고 신흥국의 위기 가능성으로 불확실성이 어느 때보다도 고조

- 기술혁신이 몰고 올 급속한 자동화는 기존 글로벌 분업체계를 빠르게 변모시키고 있음

○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으로 성장, 수출, 금리, 환율 등이 총체적으로 불안해 질 수 있는 퍼펙트 스톰이 몰려오고 있는데 우리의 대비는 다른 국가에 비해 크게 뒤처진 상태

- 스위스 최대 은행 UBS가 전 세계 139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4차 산업혁명 적응순위에서 한국은 25위, 미국(5위), 일본(12위), 독일(13위)은 물론 대만(16위)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3] 4차 산업혁명 적응도 순위



4. 위대한 i 의 발목 잡는 J노믹스

- ‘나라다운 나라’ 가 아닌 ‘나라 DOWN 나라’ 를 만들고 있음
 - 국가주의와 포퓰리즘이 결합된 반시장적 정책 강행, 경기활력을 저하시키고 있음
 - 문재인 정부는 기업 때리기를 통한 대중적 인기를 위해 온갖 규제
로 기업을 옥죄고 있으며, 자유로운 시장을 불신하여 걸핏하면 직접
적인 개입에 나서 시장질서 왜곡
 - 국민연금이 기업의 경영에 참여하여 지배구조까지 좌지우지하겠다는 스
튜어드십 코드,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 통신비, 카드 수수료까지 직접
책정하는 등 新관치가 대대적으로 부활
 - 성장 없는 성장정책인 소득주도 성장정책을 고집하며 성장률 둔화,
고용참사, 분배쇼크, 자영업 붕괴를 초래

- 그런데도 정부는 ‘나홀로’ 경기를 낙관하며 국민의 정책수정 요구 외면
 - 급격한 최저임금인상 정책의 부작용을 소상공인 예산 지원, 카드 수수료 개입 등 세금과 관치를 이용하는 연쇄적 미봉책으로 대응하면서 악순환 초래

- 정부는 세금으로 과도한 복지, 땀질 처방에 피부우면서 국민의 정부 의존성을 심화시키고 미래세대의 부담만 급등시키고 있음
 - 세금으로 만드는 공공일자리,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문재인 케어 등 문재인 정부 주요 정책은 공통적으로 세금을 재원으로 한 복지 포퓰리즘일 뿐, 생산성 및 성장잠재력 확충에 역행하는 정책

- 귀족 노조 등 반개혁적 세력에 포획되어 미래를 위한 개혁을 후퇴시키고 있음
 - 노동개혁은 외면하고 고용세습을 방조하면서 새로운 기득권이 탄생되고 있음
 - 결국 대·중소기업간, 정규·비정규직간 이중 노동시장 문제 해결이 요원해지면서 근로자간 소득 불균형도 심화되고 있음
 - 산업구조조정의 차질이 불가피해 신 성장동력 확충의 기회를 상실하고 있음

5. 위대한 i 를 다시 뛰게 하는 i 노믹스

□ 위대한 국민을 믿고 i 가 마음껏 뛰도록 풀자!

○ 스타트업·벤처·기업을 위한 과감한 규제개혁

-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 도입 확대
- ‘규제비용 총량제’ 를 도입하여 무분별한 규제도입 방지
- 규제법률 및 시행령을 전수조사하여 △시장실패시에만 개입 △원칙 허용, 예외 금지 △사전·사후 규제 영향 평가 라는 3대 규제 원칙에 따라 개선안을 제시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제정책 결정의 분권화

- 지방자치단체의 결정권 강화
- 최저임금 교섭 분권화
 - 현재와 같은 중앙·집중적 교섭 방식의 획일성을 탈피, 지역별, 산업별, 직종별로 분권화하여 당해 지역, 산업, 직종이 처한 상황에 맞게 최저임금 책정

□ i 를 위해 불공정·특권 구조를 바로 잡자!

○ 근로취약층·중소기업을 위한 특권구조(지대이익 추구) 해체

- 혁신역량 발휘를 저해하는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행위 근절

- 공공부문 및 대기업 노조 특권 타파

○ 비정규직·협력업체를 위한 이중 노동시장 개혁

- 중향평준화 연대임금제 도입 검토

- 중향평준화 연대임금제는 정부의 친노동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제시한 개념으로 대기업의 임금 상승을 억제하는 대신, 중소기업의 임금 상승률을 높여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를 줄이는 방안

- 다양한 고용형태 보장 및 노동시장 유연안정성 강화

○ 세금부담을 줄어질 미래세대를 위한 공공부문 개혁

- 공무원 정원 동결을 추진

- ‘공공부문 임금공개법’을 제정하여 투명한 임금 공개

- 공기업 구조조정 및 경쟁 도입

○ 공정한 기회에서 배제되는 국민을 위한 사회투자 강화

- 성인을 위한 평생교육체제 강화

- 아동 여성에 대한 공공지출 확대

- 사회안전망을 강화해 경쟁에 탈락하고 뒤쳐진 사람 배려

○ 국민과 함께 하는 국정 거버넌스 혁신

- 관치 혁파, 정부기능의 혁신적 재조정
- 재정준칙, Paygo원칙 등을 법제화하는 ‘재정건전화특별법’ 도입하여 재정 포퓰리즘 차단
- 정책숙려기간(Policy Cooling off) 제도를 마련하여 졸속 정책 도입 최소화
- ‘넓은 세원, 낮은 세율’ 원칙 하의 선진 과세체계 확립

□ i 의 성장역량을 키우고 도약의 미래를 열자!

○ 창의적 인재육성을 위한 대학 및 교육 개혁

- AI기반 학습혁명
- 창의성과 수월성 중심의 교육시스템 강화
- 대학의 자율성 강화
- 대학 스타트업 천국화

○ 혁신역량 축적을 위한 국가R&D체계 정비

- 국가는 기초과학, 민간은 응용기술 및 사업화에 집중
- 4차산업혁명 분야에 선도적 집중적 투자

- 기업 R&D역량 강화를 위한 과감한 인센티브 제공

○ 신성장동력 육성을 위한 Three Valley 조성

- S밸리(Start-Up Valley), G밸리(Grow-Up Valley) ,U밸리(U-Turn Vallry) 조성
- 혁신적 i 의 연결을 통해 플랫폼 비즈니스 활성화

○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성장사다리 강화

- 중기정책 목표를 ‘보호’ 에서 ‘경쟁력 강화’ 로 전환
- ‘脫중소기업 지원제’ 를 마련하고 소상공인기본법 제정
 - 소상공인, 중소기업이 중견·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 조성
- 스타트업, 벤처기업을 위한 패자부활제 확립
 - 실패의 경험을 사회적 자산화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지원을 통해 창의적 인재들의 기업가적 도전 장려

○ 미래성장 주체가 될 여성·청년·미래세대 주도 사회 조성

- 획기적 결혼·출산 장려금 도입
- 여성이 경력단절 없이 일할 수 있고,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사회 여건 마련
- 청년지원 법률 제정

- 미래세대가 참여하는 기본소득 및 연금개혁 논의 기구 설립

6. 결어 : ‘우리는 어떤 국민인가’

○ i 아이노믹스는 완성이 아니고 오히려 시작

- 개개인의 혁신역량이 성장을 견인하는 경제, 그 꿈을 만들어가고 또 실현가능하게 하는 기반을 지속적으로 구축해야 함
- 우선 거당적 i 노믹스 추진위원회(가칭) 구성
 - 당 내외 전문가를 중심으로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치열한 의견 수렴을 통해 견고하고 세밀한 정책 수립 및 입법 지원
- 당 정책위를 중심으로 i 노믹스 입법 추진
 - 주요 입법과제를 선정하고 사안에 따라 당면 입법과제, 중장기 입법과제로 분리 추진

○ i 노믹스는 ‘우리는 어떤 국민인가’ 를 묻는 것에서 기존 경제정책들과 근본적인 차별성을 가짐

- 김병준 위원장은 “ ‘국가권력에 의해서 통제돼야 할 국민인가, 자유의 정신에서 스스로 잘 할 수 있는 국민인가’ 를 묻는 데서 i 노믹스의 정신은 출발하여, 우리 국민의 대단함을 확인하고 다시 한번 도약의 기회를 맞이하게 될 것” 이라고 강조



이슈브리프 ISSUE BRIEF (IB 2018-23)

편집위원회 위원장: 노명순 편집위원: 김창배·이윤식·최진웅 간사: 이윤경

발행처: 여의도연구원 TEL: 02.6288.0502 Website: www.ydi.or.kr

주소: 서울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73 우성빌딩 3층 여의도연구원

발행일: 2018년 12월 06일 디자인·인쇄: 원기획

〈이슈브리프〉는 각종 현안이슈에 대한 분석과 전망, 대응방안 등을 제시함으로써
정책에 대한 이해를 돕고 의정활동에 참고·활용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보고서의 내용은 자유한국당과 여의도연구원의 공식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